아르헨티나가 코앞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5월15일 국민담화에서 경제는 원칙 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주체 전반의 개혁을 주문했다. 또 일부의 경제위기론 과 관련해『우리 국민과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고 자신감을 표시하면서『개혁을 저지하고 불리한 정책을 유리한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위기를 확대 주장하고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어찌 보면 말도 안되는 공염불로 해석된다. 경제가 원칙에 따라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재벌들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현재의 경제위기가『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는 부분에서는 그 안이함과 현상인식의 차이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경제위기 의식을 조장하거나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최근 재벌들이 경제위기를 부풀리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계열 금융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구시대적 작태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수지분으로 대기업을 지배하려는, 또 대기업이 자신들의 재산인양 영원히 소유하려는 인식 역시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각종 악재가 산적해 있고 심각한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개혁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주권한 강화, 기업감시 강화를 위한 각종 장치들을 현실화하거나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내리 곤두박질치며 주가가 800선 이하로 하락한 것도 국제유가 급등 및 중국의 과열경기 억제 쇼크, 미국의 금리 인상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재벌들이 아직까지도 구시대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투명성이 떨어져 시중의 넘쳐나는 돈을 끌어들이지 못함으로써 외국투기자본에 의지해온 자업자득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를 마냥 즐거운 눈으로 쳐다볼 수만은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은 노사문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뒤에 깔려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현재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 등 복리후생 분야 개선이 논의되면서 각종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거론되고 있다. 배가 부른 귀족노조 역시 투쟁노선을 상실한 나머지 임금·단체협약에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경기침체 및 경쟁력 약화로 도산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오히려 노사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국내수요 부진으로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해외 트리플 악재까지 겹친 판에서 노사불안 요인까지 야기되면 기업이민 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고 산업공동화 역시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화학섬유를 비롯해 플래스틱 가공부문이 대표적인 산업부문으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나머지 해외탈출이 줄을 잇고 있고, 전기·전자에 통신·자동차 부문까지도 해외이민에 나서고 있는 판에 고임금과 무절제한 노사분규 관행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추가부담까지 안으라면 누가 한국에서 기업경영에 나설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회사가 망해도 임금은 올려주어야 하고, 회사가 망해도 주5일 근무는 필수이며,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선 지금에도 힘든 일(?)은 절대 사양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사태를 모면하고 제2기 집권에 들어간 것은 더 이상 논란을 벌일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잘못된 현상인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스스로의 개혁은 뒤로 하고 상대에게만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또다른 실패를 담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배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솔직함과 포퓰리즘의 허상을 던져버리는 대담함, 그리고 스스로의 토대

부터 개혁하는 과감성이 없으면 제2의 탄핵정국이나 대통령 불신임이라는 뇌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 걸음이 바로 정부부처 통·폐합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와 정책의 혼선 예방이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와 정부조직을 동시에 혁신하고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때 오늘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음은 당연지사이고, 바로 아르헨티나를 향하는 뱃머리를 돌릴 수 있다.

<화학저널 2004/5/24>